



민생 쟁기기·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김관영 도지사 취임 10여일

취임 첫 행보로 민생현장 하나로마트 전주점 찾아
정책조정회의서 재난 대응·물가 안정대책 등 논의
중앙부처 찾는 등 '경제 도지사'로서 행보 이어가

민선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민생문제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짧은 도지사 다룬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첫날인 1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4일 열린 첫 번째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도지사는 "매주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추진할 것"과 "선제적 물가 대책 방안을 검토하여 추경 등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시향도 조속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내 폭염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대책과 공동 협력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역동적이고 일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보고를 지양하고, 구두보고와 토론에 기반한 생산적인 회의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7일 취임 후 첫 간부 회의에서는 혁신적 행정, 현장행정, 공직기강 등을 강력히 당부했으며, "기름값 등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과, "8월부터 실시하는 실국별 업무 보고 시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 줄 것"

도 주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는 서울 용산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건배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공약인 새만금 사업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지원을 통해 전북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과, 전북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대학 학과를 터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별급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 내 밸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 답하고,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월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주말에도 중앙부처를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첫 간부회의 모습.

(사진=전북도청 제공)

해 국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 9일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면담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군산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상향 지원과 그린수소 생신을 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 등 전북도 종합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확보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11일 기재부, 문체부, 국토부를 방문해 전북공유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대 2차관과 만나 예타 진행 중인 전북 사업의 조속한 통과와 대통령 전북공유 사업의 정부와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대 2차관과 만나 예타 진행 중인 전북 사업의 조속한 통과와 대통령 전북공유 사업의 정부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추가 지원'과 관련해 전라북도 지역특화분야인 '자산운용금융', '공공의료복지', '농생명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전북도 우선 배치 지원을 건의했다.

조용만 차관에게는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정이 출범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으나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가장 짧은 도지시답게 속도감 있고 마힌 것은 과감히 돌파구를 찾는 혁신도정의 성공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최대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의 협치와 소통을 통해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본격

내달부터 서면·현장실사 등 심의 절차 진행… 도, 대응에 총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8일 경영부에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뜻한다.

총 10개소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은 지난 2020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목표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현장 실사 등 심

의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서류심의가 진행된 이후 오는 10월경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현장 실사와 12월 인증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서면심의에 따른 신청서 수정·보완은 물론, 현장 실사 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점검 및 보수 등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고군산군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생태탐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될 경

우, 해안형(전북 서해안권), 산악형(진안·무주)에 이은 도서(島嶼)형 국가지질공원 운영으로 우리도 생태관광 브랜드 디amon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경관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지질 탐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으로 고군산군도 명품 관광지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고군산군도 우리 도 3호 국가지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인증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